

원주~강릉 복선철 '위용' 드러냈다

공정률 46%, 본격 궤도 터널 34개 중 18개 관통
오늘 부총리 원주 현장 방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기간시설인 원주~강릉복선전철사업이 공정률 50%에 이르는 등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원주~강릉철도사업의 핵심 구간 중 하나인 평창 '면은고가교' 공사현장. 원주~강릉 철도공사 구간에 건설되는 교량 가운데 가장 긴 장대 교량인 면은교가는 최대 높이 30m에, 40~50m

간격으로 16개의 교각이 설치됐다. 고가구간만 670m에 달한다. 면은고가 건설사업은 현재 상부 슬라브 작업까지 모두 완료됐으며 본격적인 선로 노반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이 구간은 지난 2012년 10월 착공했으며 213억원의 사업비와 연인원 2만 2000명, 7000대의 장비가 투입돼 지난 해 12월말 완공됐다.

원주~강릉 복선전철화사업은 이처럼 전 구간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 2012년 6월 착공한 이후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직전인 2017년말 개통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평창터널(8718m)과 둔

내터널(8293m)이 잇따라 관통됐다. 원주~강릉 철도사업 구간에는 총 34개 터널이 건설 중으로 현재까지 모두 18개 터널이 관통됐다.

평창 진부~강릉을 잇는 대관령터널(21.7km) 공사도 한창이다. 이 터널공사가 완공되면 국내에서 두번째로 긴 터널이 된다. 지난 달에는 원주~강릉 철도의 전원과 전차 선로 등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기공급 시설 공사가 본격 시작됐고, 선로 궤도공사도 착공됐다.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도 대폭 증액돼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전체 사업비 3조8417억원 중 지난 해까지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는 당초 9200억원이 사업비로 책정됐으나 추경을 통해 2920억원이 증액되면서 모두 1조 2120억원으로 늘어났다.

한국 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관계자는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2017년 말 완공을 위해 내년 말까지는 60%대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일 원주~강릉 철도공사 현장을 방문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원주 호저면의 원주~강릉 철도 건설현장 제1공구 현장사무소를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경 등 예산 집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백오인

【 2015.08.10(월) 건설경제 】

총사업비가 24조원에 달하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현장이 건설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양국 간 협의에 따라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이하 MURO)과 미 육군 극동공병단(이하 FED)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주요 시설물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 양측에서 모두 자살과 분신으로 건설인들이 잇달아 죽어가고 있다.

이는 MURO가 예산 절감을 위해 박하게 책정한 공사비를 건설업체가 무분별하게 저가 수주하고 미군의 높은 요구수준과 까다로운 공정관리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MURO 측 발주 현장 대부분의 원가율이 적게는 110%에서 많게는 1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원가율은 지난 2011년 4월 주한미군기지 이전 시설사업(YRP·Yongsan Relocation Program) 중 처음으로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한 주한미군기지 초동, 고등학교 신축공사에서 비롯됐다.

설계 대 가격비중이 6대4인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실시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이 공사는 S사가 추정금액 대비 63.5%에 저가 수주하며 MURO가 이후 쏟아낸 기술제안입찰에 공사비를 박하게 책정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애초 미군이 떠날 용산 미군기지를 개발해 거둬들일 10조원으로 평택 미군기지를 건설하려 했으나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시기가 지연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용산기지에 잔류기로 결정함에 따라 건설 재원이 크게 부족해진 점도 한몫했다.

이로 인해 MURO와 미군기지 이전 사업관리용역을

맡은 건원·CH2M HILL 컨소시엄은 미군 측이 요구하는 높은 요구수준을 입찰안내서에 반영하면서 시공상 발생할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겼고, 건설업체는 수주난 속에 성과위주의 영업전략으로 무리하게 텅핑 수주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더욱이 국내 공공공사와 달리 FED의 까다로운 공정관리 절차로 매 공정마다 승인을 받아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점을 간과해 원가 상승과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령 파일 기초공사의 경우, 총 2000본을 항타해야 하는데 이 중 10%인 200본이 시험말뚝바기(시항타)로 하루 3회씩 항타한 결과를 확인받아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최근 보증이행업체 선정 입찰을 낸 장성급 숙소·대령 및 지휘관 숙소시설 건설공사만 보더라도 지난해 2월 말 착공해 내년 1월 초 준공할 예정이지만, 공정률은 13.7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YRP 주요 현장들의 공기는 최대 6개월가량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원가율은 치솟아 발주처와 시공사 간은 물론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간 분쟁이 일고 있다.

평택기지 건설현장 관계자는 "최근 YRP에서 빚어진 문제는 미군 측이 요구하는 고난이도의 스펙과 시작부터 잘못된 공사비 책정, 여기에 최근 전작권 이양 연기에 따라 미군들이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으려고 공정관리를 까다롭게 하는 3박자가 어우러진 결과"라며 "자주 국방력이 없어 미군에 의지해 그들이 사용할 기지를 국민 혈세로 지어주는 것도 모자라 국내 건설기업의 고혈을 짜내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성토했다. 채희찬기자 chc@

현장 대부분 원가율 110~150%
시공상 문제점 모든 책임 전가
까다로운 품질요구 '공사 제동'
시공사·하도급 분쟁으로 격화

원청업체 현장소장·하청업체 사장 잇단 자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공사비는 낮는데 악명 높은 관리시스템... 工期지연·추가비 부담 못 견디

지난 5월 7일 오전 9시 40분께 평택시 평성읍 송화리의 미군기지 이전공사 현장에서 병원공사를 하던 A사의 현장소장 김모씨(53세)가 현장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한 아파트 부속 가스배관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그는 목을 매기 전 머피 지 3장에 각각 부인과 동생, 회사에 남기는 유서를 남겼다. 가족에게는 "미안하다"는 내용이었고, 회사 쪽에는 "공기가 늦어진 것은 내 책임"이라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8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시 평택읍 미군부대 K-6 내 처량정리시설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B사의 사장 한모씨(62)가 원청 C건설의 현장사무소 앞에서 분신자살했다. 이를 보고 놀란 C건설의 직원 조모씨(48)가 한 사장의 몸에 붙은 불길은 잔여 노력했지만 불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한 사장은 전신을 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 조씨 역시 심각한 화상을 입고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한 사장의 분신자살 기도의 원인을 찾았다며 B사 현장사무소를 찾았다. 거기에는 한 사장의 유서가 놓여 있었다. A4용지 두 페이지 분량이었다. 유서의 사연은 구구절절했다. 요약하면 '갑(A건설)의 황포가 자살의 이유였다. 한 사장은 A건설의 막부내식 현장 운영방식을 '갑질 살인'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유서 말미에 떨리는 손으로 적었다. "억울하다. 더 살고 싶었다." 한 사장은 5월 18일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사망했다.

원청사와 하청사의 연이은 자살. 도대체 평택 미군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방부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MURO)과 미 육군 극동공병단(이하 FED)이 공동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내 건설업체들이 시공을 하지만 실제 사용자인 FED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하는 해외건설

사업인 셈이다. 다른 국방부 발주 사업과 달리 미 육군 극동공병단 FED의 품질관리는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이번 자살사고가 벌어진 현장은 FED가 발주한 사업이 아니고 국방부와 LH공사 등이 공동으로 만든 발주기관인 MURO에서 발주한 공사이지만, FED가 사용자 측 입장에서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 등을 하고 있다. 검사를 담당한 업체도 미군공사인 점을 감안해 국내 업체와 미국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미군 발주 관리 컨소시엄에 자주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 임원은 "FED가 요구하는 품질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미 시공된 한 개 층을 통째로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경우도 많다"며 "우리나라 건설 관행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들이 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손실을 크게 입는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FED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건설업체는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기 및 공사비가 증가되고, 그에 따른 원청사와 하청사 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식 관행과 미국식 규칙의 충돌 문제는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공기 지연이 철저히 기록으로 남아 대금지급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형식적으로 발주처에 공정을 보고하고 공정이 좀 늦어지더라도 돌관 작업 등을 통해 만회대책을 세우고 최종공기 준수를 약속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FED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가 공사를 개시할 때 NAS(Network Analysis System)라는 일종의 공정관리시스템에 공정과 금액을 세밀하게 입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 단계별 공정관리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기성이 지급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



지난 5월 13일 평택시 평성읍 송화리 미군기지 이전공사 현장(K-6) 앞에서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 모인인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와 평성 미군기지 주변 상인회 회원 등 50여명이 "미군기지 이전공사 현장에서 비현실적인 공사금액 탓에 지역업체들이 도산하고 있다"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평택미디어제공

발주는 국방부 산하 MURO 관리의 미국군 극동공병단 '한국서하는 해외건설' 또는 단계별 공정목표 못 채우면 기성액 지급 안되고 배상도 "막부내식 저가발주 폐해" 지적

배상도 해야 한다. 해외공사 경험이 많은 대형사 관계자는 "목표 공정을 중간에 체크해 기성을 지급하는 것은 정확히 해외공사 스타일로, 특히 해외사업 경험이 많지 않은 건설사가 FED 사업에 참여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신자살자가 나온 현장이 FED가 직접 발주하지 않고 국방부와 LH가 발주한 현장이더라도 FED는 공정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를 했을 것이고, NAS 시스템에 의해 기성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압박은 국내 공사에서 느끼는 것과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하루를 사이에 두고 자살한 원청사 현장소장과 하청사 사장의 유서에 공기에 대한 내용이 동일하게 담긴

것을 보더라도 FED 시스템의 압박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사업은 국내 발주방식으로 발주된 현장으로 내역입찰로 계약이 됐는데, 품질기준에 해당하는 시방서의 도면은 FED에서 제공했다. 단순한 공기 관리 문제 외에 입찰방식과 대금지급에서도 한국식과 미국식이 충돌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건설 경험이 부족한 C건설의 경우 다른 현장의 건설사보다 늘 하청사들에 돈을 채주 못했다. 공사 초기 C건설이 10억원가량의 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였던 I산업개발이 법정관리로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H건설·W기업·J건설 등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모두 도산해버렸다. 평택 사업에 참여한 다른 현장들도 문제는 있지만, 유독 C건설 하도급 업체들의 부도가 많았다.

특히 분신자살한 한 사장의 B사와 C건설 사이의 마찰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B사가 2013년 5월에 수주한 철골구조 공사는 작년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FED 체계에서 공기가 8개월이나 지연됐고 지난 5월까지 공정을 이 90%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원청인 C건설의 전체 공정은 28%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업체에서는 C건설의 입장에 이해가 간다는 반응이다. C건설의 입장에서 사태를 보면 B사가 맡은 철골구조의 공기 지연으로 C건설의 공기 준수가 위협해진 만큼, C건설은 B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여겼을 것이라는 얘기다.

미군발주 사업에 참여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들은 "사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막부내식 저가발주로는 양질의 공사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실증 사례"라며 "저가발주로 굳어진 원청-하청 간 분쟁 등이 폭발한 현장은 만큼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접근해 건설 산업 제도개선을 위한 교보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환기자 jh606@

공사 진행 현황은

평택기지 마스터플랜



**현재 공정률 80%
2017년 이전 완료**

우여곡절을 겪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공사'가 공정률 80%를 보이며 내년 후반기 이전을 목표로 준비가 한창이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는 기존 500만㎡ 부지에 확장부지 970만㎡가 더해져 1470만㎡ 규모로 단일 미군기지는 세계 최대다.

송탄 K-55 미 공군부대와 대구시 남부 캠프 위커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며, 국내 미군기지는 '대구시 캠프 위커'와 '평택 미군기지' 등 크게 2개로 나뉘어 예정이다.

이번 이전사업은 1987년 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당시 국력이 강해짐에 따라 서울에 외국군이 주둔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파주·동두천·의정부·부산 등에 위치한 미군기지가 도시개발제한과 교통장애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이전 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이후 1990년 6월 한·미 양국은 '한·미 기본합의서'를 체결해 용산기지를 199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나 비용 부담으로 보류했다.

2001년 용산 미군기지 내 미군숙소 건립사업이

**전체 1470만㎡ 단일 미군기지 최대
工期, 당초 계획보다 8개월 지연**

문제되면서 미군기지 이전 논의를 다시 시작했고, 당해 11월 제3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에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합의를 체결했다.

LPP는 전국 주한 미군 시설을 통합해 불필요한 시설과 토지를 한국 측에 반환한다는 내용이다.

지역주민과 국민 간의 합의 과정을 거쳐 2007년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 8여년 동안 용산미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가 동시에 공사 중에 있다.

평택 미군기지는 지난해 말까지 80%의 공정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공기가 길어져 8월 현재에서야 80% 안팎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김영일 공보담당관은 "올해 말까지 88%를 목표로 공사 중"이라며 "내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해 2017년에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향후 한·미연합사령부의 잔류 여부'와 '동두천 미 2사단의 평택 이전' 등 2가지 사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지난해 10월 제46차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용산 잔류를 합의했다. 한·미연합사령부에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직무를 겸한 직원이 많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확정했지만, 한·미연합사령부의 거취를 결정짓기는 어려워졌다.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이를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두천 미 2사단의 경우, 포병부대에 속한 한국군 포병의 수준이 향상됐을 시에만 2020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고 양국은 합의한 바 있다.

김현지기자 hyun@

건설업체에 '죽음의 땅' 왜?

**발주처, 기술형입찰 불구 저가경쟁 부추겨
물량난에 울며 겨자먹기식 수주 '눈물'**

평택미군기지 건설현장이 시공 적자와 공기 지연에 신음하면서 그로 인해 파생된 원·하도급사 간 갈등과 각종 사건, 사고 등 갖가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건설업계와 시장 전문가들은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 속에 2011년부터 본격화된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YRP)의 일환으로 각종 대형 공사 발주가 잇따르면서 업계는 너 나 할 것 없이 수주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발주 전 단계에서부터 입찰찰(계약), 시공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공사발주 이전에 이뤄지는 설계 및 공사비 책정 과정부터 문제였다.

시설 사용자는 미군인데 비용은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식이다 보니, 우리 기준 공사비로는 그들이 요구하는 설계 품질이나 자재 수준 등을 맞추기 힘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군의 하루 임시 주거비(숙박비·식대 등)는 30만원 수준으로 우리 군의 3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을 만큼, 미군 측의 요구 수준과 우리기준의 공사비는 격차가 크다.

결국 공사비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책정됐고, 업계가 이를 부지불식간에 수주하면서 적자의 악순환이 시작됐다.

물론 당시에도 시공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지만, 이를 알면서도 혹은 계산하지 못하고 덜컥 수주하는데는 업체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극심한 수주난 속에서 복지 논리에 밀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마저 급격하게 줄어들던 터라 대부분의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식 수주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저가경쟁 위주로 진행됐던 YRP공사의 입찰찰 과정도 갖가지 병폐를 부르는 데 일조했다. YRP 건설공사 발주가 정점에 달한 지난 2012년과 2013년 집행된 입

찰을 들여다보면, 최저가 낙찰제 또는 기술제안 등 대부분이 기술형입찰 방식으로 집행됐다.

기술형입찰이라곤 해도 당락은 사실상 가격(투찰가)으로 결정되기 일쑤였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 절감에 열을 올렸던 정부와 발주자는 기술형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을 위한 가중치 기준 중 가격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이며 저가 경쟁을 유도했다.

이렇다 보니 설계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기술형입찰 시장에서 지금의 시각으로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50%대 낙찰률이 기록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군측의 성과요구 수준이 100이라면 우리 기준 시설공사비는 70~80에 책정됐고, 다시 입찰을 통해 저가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였다"며 "결국 그 피해와 부작용이 2~3년 후인 지금에서야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상의 리스크 역시 일반 공사 현장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미군 관련 공사를 수행 중인 업체들에 따르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통 보안이고 차순위는 미군 방식의 작업기준이다.

현장 출입 및 작업 시종료 시간에 대한 철저한 통제는 물론, 매일 드나드는 근로자에 대한 신원조회나 장비에 대한 점검도 거를 수 없다. 또 각종 조사와 점검, 행사, 훈련 등이 진행되거나 기상 여건 등 미군 기준이 정한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해당 작업은 수행할 수가 없다. 이는 부족한 작업시간과 효율성 저하로 이어졌고, 결국 공정 관리 문제가 생겨도 보안 문제로 인해 야간이나 새벽시간 보충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간이 갈수록 공기 지연과 시공 적자로 인한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원도급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경영난으로 인해 위기를 겪거나 저가수주 현장에서 하도급사가 부도 등으로 중도 타절이라도 한다면, 현장은 말 그대로 '죽음의 땅'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봉승권기자 skbond@